

일본의 ODA 동향 :

ODA 일원화 최종 보고서 제출

일본 정부의 ODA 개혁방안을 검토해온 ‘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’(관방장관의 자문기구)는 2.28 ‘해외경제협력회의’ 창설 및 엔차관, 무상원조, 기술협력사업의 JICA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바,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음.

1. 보고서 주요내용

가. ‘해외경제협력회의(가칭)’ 창설

- 해외경제협력의 중요사항을 총리 및 소수의 각료가 기동적으로 심의하는 ‘사령탑’으로서 ‘해외경제협력회의(가칭)’를 창설(연호 ‘ODA 각료회의’를 의미)
 - 동 회의에는 총리, 관방장관, 외무대신, 재무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이 참여하고, 필요시 기타 각료가 참석
- 해외경제협력회의는 해외경제협력 관련 아래 중요사항에 대해 대국적 관점에서 기본전략 및 방향성 등을 결정

- ODA 전략 틀(ODA 대강, 중기정책, 주요 국별·분야별 원조계획,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일본이 추진하는 ODA 관련 이니셔티브 등)
- 주요 개도국에 대한 해외경제협력 내용(중점 전략분야와의 관계, 원조방법의 균형, OOF와의 연계, 민간자금의 활용 등)
- 특정 중요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
- ODA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(평가, 국민참가, 현지 ODA 태스크포스 운영 등)
- 기타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중요사항

- ODA 사업은 안전발굴, 교섭, 국내조정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바, 현재의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실무현황 및 ODA와 외교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려, 향후에도 외무성이 관계성청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ODA 조정의 중핵을 담당
- 한편, ‘사령탑’으로서의 기능을 기동적,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소수정예의 사무국을 내각관방내에 설치

나. 실시기관의 JICA로의 일원화

- 엔차관, 기술협력, 무상원조사업간의 연계강화를 위해 JICA로 실시기관을 일원화
 - JBIC의 엔차관 부문은 JICA로 통합하며, 무상원조사업에 있어서도 JICA를 실시주체로 함.
- 단, 엔차관에 있어 현재의 각성청간의 협의, 연계체제를 유지하여 재무건전성 및 무역·경제상의 관점 등을 확보
- 무상원조사업 중 외교적으로 효과적인 타이밍에 기동적으로 실시해야 할 부문 및 위험지역 공여 등 실시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은 계속하여 외무성이 실시를 담당
- 현재 기술협력사업의 60% 이상을 JICA에서 실시하고 있고, 나머지 약 40%를 13개 성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, 전략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무성 등 관계성청이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, 연계를 강화

다. JBIC의 국제금융부문 처리

- JBIC의 국제금융부문은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에 통합하나, JBIC의 해외 인지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의 국제부문은 일정한 조직적 독립성을 유지
 - 또한, 국제부문 수장(首長)의 대외적 위치 등을 포함, JBIC의 현재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
- 아울러 새로운 JICA하에서의 엔차관 부문과 국제금융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연락협

의회 설치 등을 검토

※ 금번 보고서 원문은 www.kantei.go.jp의 ‘主な報告書・答申等’에서 입수 가능

2. 금번 보고서에 대한 일본 언론 평가

- 일본 언론은 금번 보고서에 대해 대체로 ODA 관계성청의 기득권이 유지된 내용인 것으로 평가
 - JBIC의 엔차관 부문이 JICA로 이동하게 되나, 재무성, 외무성, 경제산업성 등이 관여하는 기존의 협의체제는 그대로 유지
 - 무상원조중 ‘효과적인 타이밍에 기동적으로 실시하여야 할’ 업무는 외무성이 계속 담당(마이니치 신문은 동 규모가 2005년 기준 외무성 무상원조예산 1,760억엔의 40%에 해당하는 약 7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)
 - 기술협력사업의 경우에도 40% 정도 사업을 13개 성청이 계속 담당
 - 수출금융 등 JBIC의 국제금융부문은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으로 이관하게 되나, 조직적 독립성이 보장되고, 동 수장도 기존 JBIC하에서의 위치를 유지
- 아울러, 관계성청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명목상의 일원화가 이루어져도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
 - 아사히 신문(3.1)은 재무성이 엔차관을, 외무성이 기술협력 및 무상원조를 사실상 계속 관할하게 됨에 따라 일원화에 따른 종합적인 기획입안 및 효율성 제고 효과는 없을 것이

라고 분석

- 마이니치 신문(3.2)은 '해외경제협력회의'가 ODA 정책의 평가도 담당하게 되나, 동 사무국이 사실상 재무성 및 외무성 관료로 충당될 가능성이 커,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

3. 향후 전망

- 금번 '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' 보고서에서 국제금융부문의 신정책금융기관으로의 이전 등 JBIC 개혁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일원화를 포함한 '행정개혁추진법안'을 3.10경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
 - 이후 동 법안에 따라 구체 개혁추진
- JICA로의 실시기관 일원화는 JICA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

- 한편, 금번 개혁에서 외무성의 ODA 조정기능 강화 및 일부 무상원조사업의 JICA 이전이 포함됨에 따라 외무성은 관련 조직개편을 포함한 구체 후속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

- 동 관련, 아소 외무대신은 2.24 기자회견에서 외무성내 '국제협력국' 창설 및 '국제협력종합정책본부' 설치를 지시하였다고 밝힘.

- 양자 ODA 등을 담당해 온 경제협력국과 국제사회협력부의 다자 ODA 기능을 합쳐 새로운 '국제협력국'을 창설, 양자 및 다자 ODA를 연계하고 외교전략에 입각하는 종합적인 기획입안 기능을 강화
- 외무대신 직할로 '국제협력종합정책본부'를 설치, 외무성내 모든 실국이 ODA 기획입안에 참여토록 함.

[자료: 주일본 대사관]